

# 광주 장애인단체, 市에 권리보장 정책 마련 촉구

휠체어 지하철 탑승·거리행진  
새빛콜 횡수 제한에 이용 불편  
성폭력피해 장애여성쉼터 전무

광주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결의대회를 열고 광주시를 향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광주 장애인 단체로 이뤄진 광주420공동투쟁단은 23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기정 시장의 공약 정상 추진율은 99.5%지만 장애인 공약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광주시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 시범사업은 지난해 추진되지 않았으며 올해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며 “공약대로 이뤄진 게 없고 필요한 예산조차 반영되지 않았지만 정상 추진 사업으로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광주에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으나 광주 저상버스는 의무 대수에 못 미치는



23일 오전 광주 장애인 단체가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2024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요구안 발표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38% 수준이다”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경우에도 전용차량이 127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광주시의 장애인 전용 특별교통수단인 새빛콜 이용 한도가 하루 4회로 제한됐다”며 “누가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장애인들은 알지 못한다. 7일 28회나 1개월 120회로 지정하는 건 왜 안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중증 뇌병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주간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은 찾기 어렵고 성폭력 피해를 당한 장애 여성 지원 센터는 전무하다”며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체계 구축과 근육장애인 지원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장애인들이 나갈 수도, 일할 수도 없는 광주에서는 ‘내일’도 ‘내일’도 기대할 수 없다”며 “행정 당국은 검토해 보겠다는 애매한 답변 말고 광주지역 장애



23일 광주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이동권 및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광주 문화전당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인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지금 당장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광주시에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노동을 위한 일자리 마련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과 접근성 보장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공공으로 체계 구축 △장애인의 배움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를 위한 방안 마련 △장애

성의 권리 보장 △여러 장애유형 장애인의 생존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하철에 탑승해 문화전당역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역까지 이동하며 팻말 등을 이용해 관련 내용을 강조했다.

단체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내린 뒤 거리 행진을 통해 광주시정으로 이동, 광주시에 장애인 정책 제안을 제출했다.

글·사진·정상이 기자 sangjaeong@jnilbo.com

## 상습 마약투약 20대 여성 구속

입수 경로 등 조사 예정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3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

한 경찰은 A씨 몸에 있던 주사 자국과 환각상태에 있던 점 등을 토대로 마약 시약 검사를 시행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입수 경로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준명 수습기자

## 광주 북구의원, 공무원 게시판에 비판글 쓴 게시자 고소

해당 의원 “입법 무력화 압박”

광주 북구의원이 공무원 행정시스템인 '새울'에 올린 자신의 비판글을 쓴 게시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23일 광주 북부·북부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북구의회 소속 A의원을 비난하는 글 작성자를 찾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고소 내용을 토대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북구에 관련 자료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

문제가 된 게시글은 지난달 22일 새울 게시판에 올라왔다. A의원이 북구 금고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발의한 조례안

을 발표한 직후다. 앞서 A의원은 지난 달 북구 금고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국민권익위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북구 금고 지정 및 관리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크게 확보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를 본 익명의 작성자는 “본인이 벌금형을 받았으면서 무슨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했다고 그러냐”며 “그렇게 반응을 잘하면 윤리심사자문회의 제명 권고나 반영하지 그랬냐”고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비난만 하지 말고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의 목적을 봐야 한다’ 등의 지적 댓글이 달렸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A의원은 해당 글이 고의성을 가지고 자신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경찰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북구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의원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북구 발주 시설 개선·비품 구입 등 각종 사업에 개입, 자신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업체 2곳에 917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몰아줘 지난해 7월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북구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A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공개사과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정성현 기자

@jnilbo  
전남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전남일보 #jnilbo

고향사랑 기부제

## “해남에 기부하세요 행복이 커집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현재 주소지 외 출신지(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기부자** 개인(법인불가)
- 기부처** 주민등록상 본인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 기부액**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_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 답례품\_ 기부액의 30% 범위내에서 지역특산품 선택 가능
- 기부금 사용처** 주민복지 증진사업·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 참여방법**
  - 온 라 인\_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 대면접수\_ NH농협
- 문의** 해남군 총무과 ☎ 061)530-5295